

2단원 민주 국가와 정부

(1) 국가 기관 종합

step1. 기출 점검하기

1. 다음 글에 나타난 우리나라 헌법 기관 A~F를 아래 표에 채우시오.

헌법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A는 B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는 C의 행정부 구성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C가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인 D를 구성하는 국무 위원을 임명할 때 B의 제청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A는 E의 장(長)과 F의 장(長)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는 사법 기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F의 장(長)에게 E의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A의 동의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A	B	C	D	E	F

2. 다음 글에 나타난 우리나라 헌법 기관 A~F를 아래 표에 채우시오.

A는 헌법에 규정된 주요 국가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행사 시 B의 동의, C의 장(長)의 제청, D의 제청 등의 견제를 받는다. A는 E를 임명할 때 C의 장(長)의 제청을, 국무 위원 임명 시 D의 제청을 받아야 한다. 또한 헌법은 C의 장(長), F의 장(長), D, E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B에게 부여하여 A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면서 각 기관에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한편, A와 B, 그리고 C의 장(長)이 F의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여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F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A	B	C	D	E	F

3. 다음 글에 나타난 우리나라 헌법 기관 A~D를 아래 표에 채우시오.

A는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B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C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및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를 담당하며, C의 장(長)은 D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A	B	C	D

4. 다음 글에 나타난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를 아래 표에 채우시오.

A는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한 후, B의 장(長)과 C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이후 D에 의해 임명된 B의 장(長)은 갑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하고, 을을 정당 해산 심판을 담당하는 E의 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한편, D를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C는 D에게 ○○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였다.

A	B	C	D	E

5. 다음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헌법 기관 A~D를 아래 표에 채우시오.

(○ : 예, × : 아니요)

구분	A	B	C	D
탄핵 소추의 대상인가?	×	○	○	○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가?	×	×	○	×
법률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는가?	○	×	×	×
국무 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가?	×	○	×	×

A	B	C	D

6. 빈칸을 채워 옳은 선지로 만드시오.

- 1) ()은/는 항소 법원의 ()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 2) ()이/가 긴급 명령을 발한 경우 ()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의 장(長)은 ()의 탄핵 소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은/는 ()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원 여부 심판을 관장한다.
- 5) ()와/과 ()은/는 모두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을 ()에게 건의할 수 있다.
- 6) ()은/는 ()에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 7) ()은/는 ()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 투표 이전에 의결권을 가진다.
- 8) ()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은 단심제로 ()에서 진행된다.
- 9) ()은/는 국무 회의의 부의장으로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
- 10) 법관은 ()의 탄핵 결정 이외에도 ()에 의해 파면될 수 있다.
- 11) ()은/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12) ()은/는 법률안을 ()의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 13) ()은/는 국정 감사를 통해 ()을/를 견제한다.
- 14) ()은/는 () 소속의 헌법 기관이지만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 15) ()에 대한 ()의 견제 수단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들 수 있다.
- 16) ()의 구성원은 ()의 제청을 받아 ()이/가 임명한다.
- 17) ()에 대한 ()의 견제 수단으로 ‘탄핵 심판권’을 들 수 있다.
- 18) ()은/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 19) ()은/는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20) 국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을 가진다.
- 21) 국무 위원은 ()의 제청으로 ()이/가 임명하며, 국무 위원의 임명 시 ()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22)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은/는 이 문서에 부서한다.
- 23) ()은/는 긴급 재정·경제 명령 및 처분권을 가진다.
- 24) ()은/는 국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25) ()은/는 ()이/가 체결한 조약에 대한 ()을/를 가진다.
- 26) ()은/는 ()와/과 달리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는다.
- 27) 국회는 의장 ()인과 부의장 ()인을 선출한다.
- 28) ()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의 제소가 있을 때 그 정당의 해산 심판을 담당한다.
- 29) ()이/가 ()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전제되어야 한다.

- 30) ()의 모든 구성원은 ()의 동의를 받아 ()이/가 임명한다.
- 31) (), (), ()은/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구성 권한을 가진다.
- 32) ()은/는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가진다.
- 33) ()은/는 입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부 견제 수단이다.
- 34) 대통령은 ()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35) ()은/는 국가 예산을 결산하며, 이에 대한 심사권은 (), 이에 대한 검사권은 ()이/가 가진다.

step1 정답

1. 국회/국무총리/대통령/국무회의/헌법 재판소/대법원
2. 대통령/국회/대법원/국무총리/대법관/헌법 재판소
3. 대법원/국무총리/감사원/국회
4. 국회/대법원/국무총리/대통령/헌재
5. 국회의장/국무총리/대통령/(국회, 국회의원,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 기관)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위원, 헌법재판관, 법관, 검사...etc
6. 선지 탐구 정답
 - 1) 대법원, 판결
 - 2) 대통령, 국회
 - 3) 국회, 국회
 - 4) 헌법 재판소, 법원
 - 5) (국무총리, 국회), 대통령
 - 6) 대통령, 국회
 - 7) 국회, (대통령, 국회 재적의원 과반)
 - 8)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지방 자치 단체의 장 광역 지방 자치 단체 의회 비례 대표 의원), 대법원
 - 9) 국무총리, 없다
 - 10) 헌법 재판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 11) 국회
 - 12) 국회의장, 국회
 - 13) 국회, (정부, 사법부, 헌법 재판소...)
 - 14) 감사원, 대통령
 - 15) 국회, 대통령
 - 16) (국무회의, 대법원, 감사원),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대통령
 - 17) (정부, 사법부, 헌법 재판소.. 이외 탄핵 심판이 되는 고위 공무원), 헌법 재판소
 - 18) 대통령
 - 19) 국회, 일반 사면
 - 20) 국정조사권
 - 21) 국무총리, 대통령, 국회
 - 22)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
 - 23) 대통령
 - 24) 국회
 - 25) 국회, 대통령, 동의
 - 26) (대통령, 국회의원(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etc)
 - 27) 1, 2
 - 28) 헌법 재판소, 정부
 - 29) 헌법 재판소, 위헌 법률 심판, 법원
 - 30) 대법원, 국회, 대통령
 - 31)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 32) 감사원
 - 33) 국정 감사
 - 34) 헌법 개정안, 재의 요구 이후 재의결된 법률안
 - 35) 정부, 국회, 감사원